



4월 25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소집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하려는 홍준표의 폭주를 멈춰라

홍준표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상정하는 데 실패했지만, 하루 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25~26일 임시회를 열어 폐업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다.

홍준표는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잠시 주춤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18일 오전, 이를 전에 병원을 옮긴 환자가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조례안 통과를 막으려고 영호남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홍준표가 이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의회를 에워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짬을 보던 홍준표와 새누리당은 폐업 조례 처리를 뒤로 미루지 않고 서둘러 폐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진영은 25일 폐업 조례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

사실, 홍준표는 처음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내 이견이 있을 때조차 폐업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진주의료원 노동자 65명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받아들였을 때도 홍준표는 "전원 사표를 써라" 하며 싸늘한 냉소로 답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지도부는 투쟁 초기부터 노동자 구조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목적인 홍준표를 저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노조가 양보안을 내놓자 홍준표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홍준표가 이토록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낱을 정치적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의료원 하나를 폐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착한 적자"

복지 확대에 대한 높아진 기대 때문에 박근혜조차 대선에서 복지 확대 공약을 내세우고 취임 이후에는 복지 '떡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강행 처리하려는 홍준표를 규탄한다

튀'라는 비난에 쩔쩔매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우파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복지 확대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생각을 퍼뜨리고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워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 또, 더 나아가 깊어가는 경제 위기 하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홍준표가 '재정적자'와 '강성노조'를 명분으로 삼은 까닭이다. 최근에는 "공공의료는 박정희 시절에 도입한 좌파 정책"이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며 공세를 지속했다.

물론 이런 공격에 성공하면 우파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높일 수 있다는

홍준표의 개인적 야망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도 "도민의 뜻" 운운하며 사실상 경남도 의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신호를 줬다. 홍준표의 앞길을 열어줬다.

박근혜는 이미 당선인 시절에도 "복지의 기본 전제는 누수 부분을 철저히 막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준표는 지금 진주의료원이 바로 그 구멍이라며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최근 기업들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도 속도와 폭을 조절하라고 했다. 복지 '떡튀'로도 모자라 아예 기업주·부자들의 특권을 건드릴 생각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도 태도를 바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버텼다. 새누리당 내의 작은 분열이 봉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이 '구멍'과 '누수'라고 비난하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돈 없고 갈 곳 없는 환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것이다. 그 적자는 "착한 적자"이자 복지 지출이다.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주의료원을 지키는 것은 단지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들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다음에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더 많은 지방의료원과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려 들 것이다. 이 투쟁에서 이기는 것이 공공서비스를 방어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중요한 이유다.

폐업 조례 통과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25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조례가 날치기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은 “조례 무효”를 선언하고,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끝내 폐업을 강행한 것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을 국립병원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난한 이들의 삶과 공공의료를 내팽개친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를 보장할 책임은 중앙 정부에게 있다. 여론 조사에서도 60퍼센트가 중앙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요구가 홍준표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처럼 주민소환운동이나 내년 지방선거 등을 통해 홍준표의 악행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경남FC 축구팀에 지원하는 돈의 절반으로도 가능”한데도 홍준표는 피도 눈



물도 없이 공공의료를 내팽개쳤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업 조례 통과로 끝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공공 의료를 지켜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

박근혜가 취임 초부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공공서비스와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에 대한 광범한 반감이 있는 지금, 진주의료원 국립화 요구는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결핵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특수 병원을 제외하면 지금 이 나라에 ‘국립’ 의료원은 단 한 개 뿐이다. 이토록 형편없는 공공의료 수준을 ‘정상화’ 하려면 국립 병원을 늘려야 한다.

공공병원들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에 따른 불안정성과 불균등성에 맡겨두지 말고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국회 대응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한 일명 ‘진주의료원법’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는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우선, 빨라도 이달 말에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 25일에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이 ‘협약’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협의를 할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의 최근 태도를 보면 일각의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또,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민주당은 폐업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상화’하려면 노동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일부 공유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공격에 문을 열어 주

는 것이며, 공공병원을 질 낮은 서비스와 기능 축소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것이다. 의료와 서비스 질이 나빠질수록 공공병원을 지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은 민주당의 국회 대응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연대를 확산할 수 있는 요구를 내걸고 기층의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 이유

홍준표는 대중이 낙후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공공의료를 불신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복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퍼뜨리려 한다.

사실 이런 불신이 광범하게 퍼져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역대 정부들이 대형 병원과 제약회사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면서도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는 아껴 왔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 이래로 지방의료원은 늘 찬밥 신세였다. 1975년까지 정부 예산 중 의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퍼센트도 안 됐다. 그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민간병원들은 돈을 갈취로 굶어 모았다.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추진한 ‘공공의료제도 개선’은 지방의료원 재정을 시·도 재정에서 분리해 ‘독자생

존’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에 수익성 논리가 들어섰다.

1990년대에 초대형 민간병원들이 세워지고 IMF 이후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공공병원은 오히려 줄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전체 의료기관 중에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6퍼센트가 안 된다. 병상(침대) 수를 기준으로 해도 10퍼센트 밖에 안 된다.

IMF 이후 가속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익성’ 논리를 한층 강화하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공공병원이더라도 ‘적자’를 내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쪼먹는’ 파렴치한 짓으로 여겨졌다. 국립대 병원조차 민간 병원 뺀치는 구조조정과 돈벌이 진료로 내몰렸다.

돈벌이를 위해 과잉진료가 크게 는

반면 정작 필요한 부문에는 인력과 재정이 줄었다.

이명박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하려 한 영리 병원은 이런 추세에 도입하려 한 영리 병원은 이런 추세의 극단을 보여 준다. 영리 병원은 민간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없애고 건강보험을 무력화하는 것인데, 이는 주주들과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무상의료 등 복지 확대 요구가 커진 것은 이런 추세에 대한 커다란 반감과 불만을 보여 준다.

박근혜조차 대선 후보 시절 복지 확대 공약을 내놓았던 것은 이런 대중적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지 않고서는 재원을 늘려도 병원비를 낮추거나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의료 체계가 사실상 수익

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상의료는 ‘밀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 지원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 가능한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비극이 사라질 수 있다. 민간병원들의 의료 상품화와 돈벌이 속에서 낭비되는 재원은 이런 데 쓰여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선 투쟁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는 세력과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의 전초전이다. 이 투쟁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생명을 두고 벌이는 투쟁이다.